

5·18 이후 전두환 정권 보안사 '순화·비둘기계획' 들여다보니

# 극렬 유족 사찰·온건 유족 지원 등 치밀한 분열 공작

**유족·대학 등 와해 공작**

회유·협박 통해 유족회 쪼개기  
전남대 특정서클 와해하려  
학군단 대책비 지원 이면침투  
종교계 반정부 활동 막으려  
판문점·땅굴 등 안보견학도

1980년 5월31일 창립한 '5·18 광주의 유족회'(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전신·창립회장 박모씨)는 정부의 압박으로 현 판식조차 열지 못했다. 이 단체는 이듬해 박 회장이 꾸린 '5·18 유족회'와 '5·18 광주의유족회'(회장 송모씨)로 쪼개진다. 5·18민중항쟁 1주년을 앞두고 신군부가 주도한 회유와 협박을 받은 박 회장이 추모제 개최를 포기하고 유족회를 탈퇴해 따로 단체를 만든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5·18 유족을 분열시키고 마음을 왜곡하기 위해 벌였던 치밀한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6일 1981~1988년 작성된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내부 문건 6종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공개 자료(8000쪽 분량)에 포함된 것이다.

5·18 1주기 이후 작성된 '광주사태 1주

년 대비 예방정보활동 결과'를 살펴보면 '보안사에서는 광주사태 1주년을 전후해 불순세력의 선동행위와 광주권 주민의 잠재적 불만 의식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혼란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예방정보 활동을 전개했음'이라고 공작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잠재불만의 표출화 예방', '위령제 등 추도행사 기획 봉쇄', '불순세력군의 잠복 활동 와해' 등으로 세부 활동을 적시했다.

크게 학원(대학교), 종교인, 유가족·구속자·부상자로 나뉘 '순화계획'을 기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씨를로 제목된 전남대 민속문화 연구반과 한국농촌문제연구반을 와해하기 위해 학군단에 대책비를 지원하고 이면침투 등의 활동을 했다.

종교계 인사들의 반정부 활동을 막기 위해 5·18 1주년을 앞둔 5월 11~13일 예산 250만원을 들여 기독교계 인사 68명을 데리고 판문점과 제3 땅굴 등을 안보 견학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구속자 가족이 5월21일 미국공보원에서 농성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협조했고, 당시 유족회장을 설득해 추모위령제·묘비건립·위판식 취소 서신을 보내도록 만들었다. 또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 부상자에게는 생업자금 용자 알선을 제시하며 소송을 취하하도록 회유했다. 특히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박주민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당시 유족 매수 및 분열 공작을 직접 지시한 전두환 정권의 비둘기 시행계획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두고 공세적 시위 집압 훈련인 '총정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대기하도록 한 사실도 적시돼 있다.

1985년 작성된 '정보사업계획', 1985년 11월 작성된 '광주 5·18 유족 순화사업 추진 중간 보고', 1986년 2월 작성된 '광주사태 관련 유족 순화 계획'은 구체적인 유족 분열 공작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는 유족을 '극렬

측'과 '온건 측'으로 구분하고, 극렬 측에게는 '물뺄기 작전'을, 온건 측에는 '지원과 육성 활동'을 실시했다.

극렬한 유가족을 1대1로 조를 짜서 사찰하는 물뺄기 작전 결과 12세대 15명을 회유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온건한 유가족에게는 취업 알선, 자녀 학비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월례 모임을 축소하려 한 사실도 명시했다.

또 활동 결과를 분기마다 심사·분석한 후 사령부에 보고하고, 144만원의 예산을 분기별로 36만원씩 나눠 극렬 측 와해와 온건 측 육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사태 관련자 순화' 문건에서는 '온건 유족 회원이 강경 유족회 계주 부부를 폭행했다'는 내용을 주요 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505보안부대, 관변단체 동원 11명 '이장 공작'

**망월묘역 성역화 방해**

1983년 5·18희생자 유족 사이에서는 이른바 '망월동 공동묘지'에 묻힌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장(移葬)하면 국가에서 위로금 1000만원과 이장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당시 출지에 가장 등을 잃은 유족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웠던 터라 이 소문에 솔깃했고, 실제로 같은 해 4월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나왔다. 망월동 묘지의 성역화를 우려한 전두환 정권은 '이장(移葬) 공작'을 은밀히 펼쳐 묘역이 항쟁 구심점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희생자 묘지 이장에 대한 1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국군 보안사령부의 '비둘기 시행계획' 문건을 26일 공개했다.

198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광주 외 타 시·군 출신 희생자 유족

전남지역개발협의회가 이장비·위로금 제공 전두환이 직접 챙겨

11명에게 자율적으로 이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망자 묘 현황을 연고별로 분석해 관할 시장과 군수 책임으로 직접 '순화'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우고, 이장비와 위로금은 전남지역개발협의회(현 광주전남발전협의회·이하 개발협의회)에서 제공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순화'는 사실상 회유 공작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된다.

이장 공작 계획에 따르면 1단계(1983년 2월14일~24일)로 505보안부대가 1차 대상 연고자 11명의 배경을 정밀 조사하고 신원 환경을 분석하면 2단계(2월25일~3월10일)로 전남도 주관하에 시장·군수가

1대1로 대상자를 정밀 순화한다. 마지막 3단계(3월11일~31일)는 전남도와 505보안부대, 개발협의회가 순화 결과를 판단해 이장 작업을 펼친다.

예산은 총 1억2280만원으로 11명에게 각각 위로금 1000만원, 이장비 50만원, 순화비 3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부대 경비로 400만원을 책정한 사실이 나와 있다.

또 박 의원이 함께 공개한 '광주사태 관련자 현황'(1981년 작성) 문건과 '광주사태 관련 현황'(1983년 작성)에도 '공원묘지의 지방 분산', '공원묘지 이전 계획'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특히 '1982년 3월5일 전남도지사 각하 면담 시 공원묘지 이전 검토 지시', '1982년 9월 15일 내무장관과 도지사, 각하께 보고' 등의 내용 등이 적혀 있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담겨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미국 특수작전용 수송기 전개 예정 기록

**'5·18 상황전파 자료' 보니**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특수작전용 수송기가 전개될 예정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26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청 진압작전 이틀 전인 1980년 5월 25일 미국 특수작전용 수송기 MC-130가 전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다만, 실제 전개 여부와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장병력이 최대 7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MC-130는 특수부대의 침투 작전에 사용되는 수송기다.

이 문건에 적혀있는 '1980년 5월 25일 상황조치'에는 따로 별표 표시를 해 'MC-130 급일 중 전개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5·18이 끝난 직후인 1980년 6월 1일까지 MC-130

를 활용한 감시가 계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1980년 5월 21일 F-5 전투기 2대를 비상대기하라는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도 확인됐다. 전술통신망을 활용한 지시사항으로, 공군에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손 의원은 "공군의 비상대기는 북한군 침투 등 실제 전시상황을 대비해 즉시 출격 가능한 상태로 명령을 기다리는 상황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후 8시 20분께에는 연합사를 통해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 전개를 요청해 12시간 후 전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미군 항공모함인 미드웨이호(MID WAY)와 코랄 시(CORAL SEA)호도 24일께 전개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 야구장 소음 피해 손배소 12월 7일 1심 선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장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12월 나온 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명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12월 7일 선고 판결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었으면 충분히 소음, 빛, 교통 피해가 예견됐다. 입지 선정부터가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 아닌 상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다중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이 국내에는 없다.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음 등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했다. 소음 감정 절차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민들은 2015년 9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 데시벨(dB) 이상으로 잡고 이를 근거로 6억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광주시와 구단 측은 규제와 기준이 없어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000㎡, 연면적 5만700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

## 암표상들 자리싸움끝 주먹다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이 열린 지난 25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주변에서 암표상들끼리 자리싸움 끝에 주먹다짐을 하는 등 암표 판매·호객 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3루 출구 앞에서 통닭과 임장표를 판매하던 A(44)씨와 B(68)씨 등은 "장사에 방해되지 다른 곳으로 가라"며 말다툼을 끝에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이날 이들 외에도 3만5000원짜리 입장권을 5만원에 판매하려던 암표상 2명 등 총 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에도 야구장 안팎에 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해 암표매매 등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